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044-414-1193)

임지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wrim@kiep.go.kr, Tel: 044-414-1273)



차 례

1. 배경
2.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31일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함.
 - 인프라 투자는 8년간 이루어지는데 크게 △운송 인프라 △제조업·혁신 △돌봄 시설 △주택·학교·병원 △상수·통신·전력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운송 인프라 부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
 - 15년에 걸쳐 2조 달러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Made in America Tax Plan)이 함께 포함되었는데,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국세청(IRS)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과 더불어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1~1.75조 달러 추정)도 4월 중 발표할 예정임.
- ▶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향후 2년 동안은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무디스(Moody's)는 향후 10년 동안 1,630만 개의 일자리가 경기부양책과 자연적 일자리 증가로 생겨나며, 인프라 투자 계획만으로 2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 민주당은 8월 휴회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 원하고 있으나, 공화당과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반대, 투자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6,150억 달러 규모로 줄이고 도로, 교량과 같은 물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경우 법안 통과는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임.
 -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회계연도 2021년 예산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단순 과반만으로 표결하기 위하여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 ▶ 대규모 인프라 투자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은 한국의 수출, 투자 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원 마련을 위한 증세 현실화, 고위험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미국정부는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하여 각국 정부와 함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자며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1. 배경

- 미국의 도로, 다리, 댐, 운하, 학교와 같은 인프라 시설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2019년)에 의하면 미국의 인프라 수준은 세계 13위
- 미국의 도로 인프라는 세계 17위, 철도 서비스 12위, 전기 공급 수준 23위, 수도 공급 수준 30위 등을 기록함.

표 1. 글로벌 인프라 순위 상위 20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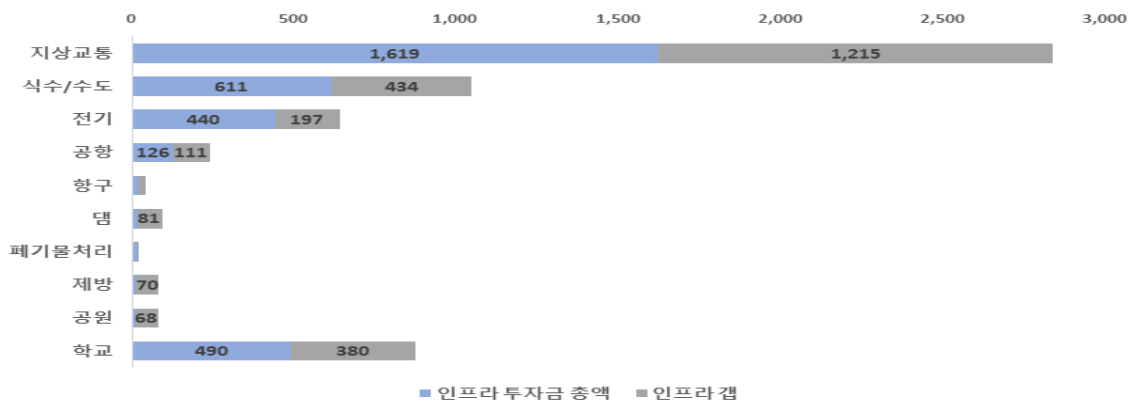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싱가포르	95.4	11	영국	88.9
2	네덜란드	94.3	12	아랍에미리트	88.5
3	홍콩	94	13	미국	87.9
4	스위스	93.2	14	벨기에	87.3
5	일본	93.2	15	덴마크	87.1
6	한국	92.1	16	대만	86.7
7	스페인	90.3	17	룩셈부르크	85
8	독일	90.2	18	이탈리아	84.1
9	프랑스	89.7	19	스웨덴	84
10	호주	89	20	체코	83.8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검색일: 2021. 4. 2).

- 미국토목학회(ASCE)에서 4년마다 발표하는 미국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2021년 미국의 인프라 수준을 C-등급으로 평가하였음.
- 보통(B 등급)보다 낙후 수준으로 평가한 이유는 미국 경제 규모와 인구 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에 비해 미국의 연간 공공예산 및 민간투자액이 적어 인프라 갭(Infrastructure gap)이 발생하기 때문임.
- 미국토목학회는 최근 4년 동안 인프라에 대한 정부와 의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그림 1. 미국의 인프라 갭 전망(2020~29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 ASCE(2021), "2021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p. 7, https://infrastructurereportcard.org/wp-content/uploads/2020/12/National_IRC_2021-report.pdf(검색일: 2021. 4. 2).

■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부와 의회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자원 조달방법, 투자 규모 등의 이슈에 양당간 이견을 보이며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함.

- 2018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재건(Rebuild America)’을 강조하며 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과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및 민간기업 자금을 동원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¹⁾
- 2019년 4월에는 석유 파이프라인 등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보호 관련 승인 절차 등 연방 규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함.²⁾
- 2020년 1월에는 국가환경정책³⁾ 수정을 통해서 국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후변화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 및 인프라 건설 규제를 완화함.⁴⁾
-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2월과 3월 각각 1조 달러,⁵⁾ 2조 달러⁶⁾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양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음.
- 2020년 7월 미 하원은 1조 5,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경기부양안(H.R.2. The Moving Forward Act)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통과에 실패해 관련 논의가 종결되었음.
-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3,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필요에 따라 선별된 지역에 무선 인터넷 및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임.

■ 한편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장 승수효과, 미·중 경쟁 심화 등도 미국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

- 인프라 투자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⁷⁾
- 중국은 세계에서 GDP 대비 인프라 투자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2040년까지 연간 GDP의 5.1%를 인프라에 투자할 전망⁸⁾
- 이에 반해 미국은 1960년대 이후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이 지속 감소

1) The White House(2018. 2. 12), "Building a Stronger America: President Donald J. Trump's American Infrastructure Initiative,"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building-stronger-america-president-donald-j-trumps-american-infrastructure-initiative/>(검색일: 2021. 4. 5).

2) The White House(2019. 4. 10), "President Donald J. Trump Is Paving The Way For Energy Infrastructure Development,"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paving-way-energy-infrastructure-development/>(검색일: 2021. 4. 5).

3)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4) The White House(2020. 1. 9), "The Economic Benefits of Improved Infrastructure Permitting,"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articles/economic-benefits-improved-infrastructure-permitting/>(검색일: 2021. 4. 5).

5) ABC News(2020. 2. 21), "Trump tries new approach for \$1 trillion infrastructure plan," <https://abcnews.go.com/Politics/wireStory/trump-approach-trillion-infrastructure-plan-69125618>(검색일: 2021.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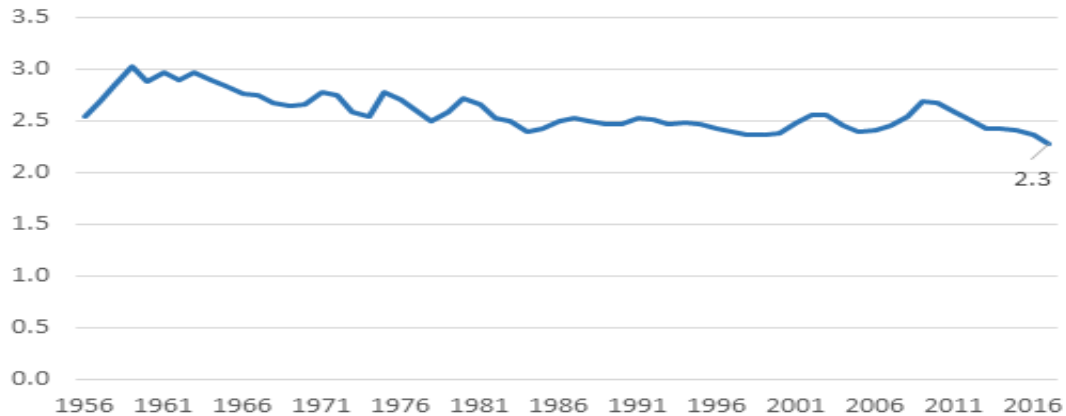
6) Reuters(2020. 3. 31), "Trump calls for \$2 trillion infrastructure bill to help economy during coronavirus crisis,"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usa-infrastructure-idUSKBN21I2F3>(검색일: 2021. 4. 6).

7) CFR (2020. 9. 1), "The State of U.S. Infrastructure," <https://www.cfr.org/backgrounder/state-us-infrastructure>(검색일: 2021. 4. 6).

8) *Ibid.*

그림 2. 미국의 연간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2018. 10), "Public Spending on Transportation and Water Infrastructure, 1956 to 2017," Exhibit 3, <https://www.cbo.gov/system/files/2018-10/54539-Infrastructure.pdf>(검색일: 2021. 4. 6).

2.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31일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⁹⁾을 발표함.

- 노후된 인프라 시설 재건을 위한 8년간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함.¹⁰⁾
-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재원 조달방안(Made in America Tax Plan)도 포함됨.
- 바이든 행정부는 3월 31일 공개한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과 더불어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Families Plan)도 4월 중 발표할 예정임.¹¹⁾
 - 물적 인프라 투자(1단계)와 인적 인프라 투자(2단계)를 합한 총투자 규모는 최대 4조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투자 부문] 인프라 투자 계획은 크게 △운송 인프라 △제조업·혁신 △돌봄 시설 △주택·학교·병원 △상수·통신·전력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운송 인프라 부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

- 운송 인프라 부문에 6,2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주로 전기차 지원, 교량·철도·도로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임.

9)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주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임. (자료: The White House(2021. 3. 31),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31/fact-sheet-the-american-jobs-plan/>(검색일: 2021. 4. 2).)

10) The White House(2021. 3. 31),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American Jobs Pla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3/31/remarks-by-president-biden-on-the-american-jobs-plan/>(검색일: 2021. 4. 2).

11) The New York Times(2021. 3. 30), "Biden Wants to Pay for Infrastructure Plan With 15 Years of Corporate Taxes," <https://www.nytimes.com/2021/03/30/business/economy/biden-infrastructure-taxes.html>(검색일: 2021. 4. 2).

- 총지출 중 운송 인프라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28%)을 차지함.
- 전기차 원자재에서 부품까지 공급망을 갖추는 한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전기차 충전소 설치, 노후 경유차 폐차, 친환경 도로기술 지원 등 친환경 부문에 투자할 예정임.
- 제조업·혁신 부문에 대한 투자(5,800억 달러)는 크게 △제조업 및 중소기업 재정비(3,000억 달러) △ R&D 투자(1,800억 달러) △직업훈련(1,000억 달러)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혁신 허브 국가 네트워크 구축, 지역 혁신거점 마련 등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으나 트럼프 행정 부에서 중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투자하고자 함.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간병인 임금 인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4,00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주택 개량 및 공급(2,130억 달러), 공립학교 시설 및 기술 지원(1,000억 달러), 병원 현대화(250억 달러)에 총 3,38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상수(1,100억 달러), 전력(1,000억 달러), 통신(1,000억 달러) 시설 개량에 총 3,1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표 2. '인프라 투자 계획' 주요 투자 부문 및 금액

(단위: 억 달러)

구분	투자액	주요 투자 부문
운송 인프라	6,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에 앞서기 위해 전기차 부문에 1,740억 달러 투자 · 전기차 원자재에서 부품까지 공급망을 갖추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장 현대화 지원 · 미국 노동자들이 배터리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 구입 시 리베이트와 세금 혜택 제공 ·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주·지방 정부, 민간부문의 보조금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 · 2030년까지 5만 대의 다중자동차와 최소 20%의 스쿨버스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 교량, 고속도로, 도로 현대화 사업과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배출 제한, 교통체증 감소를 위해 1,150억 달러 투자 · 대중교통(버스, 열차), 철도역, 신호, 도로, 신호 및 전력 시스템, 항공 시스템 현대화에 850억 달러 투자 · 철도여객공사(Amtrak)의 지연된 유지보수 공사, 교통량이 많은 북동부 지역의 철도 현대화, 기존 철도 개선 및 새로운 도시철도 연결, 철도안전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800억 달러 투자 · 화물운송에 필수적인 항구, 내륙 수로, 여객선 개선을 위해 170억 달러, 공항 시설 보수 및 자동차 없이도 항공 여행이 가능하도록 공항 접근성 향상, 터미널 리모델링에 250억 달러 지원 · 소외 지역 연결 촉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200억 달러 투자 · 저탄소 아스팔트 포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 너무 복잡하거나 규모가 커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250억 달러 투자
상수·통신·전력	3,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중독 위험을 없애기 위한 상수도관 교체(450억 달러), 상하수도 시스템 개량 및 현대화(560억 달러), 식수 품질 관리(100억 달러)에 총 1,110억 달러 투자 · 미국 전역에 고속 광대역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마련(1,000억 달러) · 노후한 전력망 현대화, 2035년까지 미국 전기발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버려진 유전 및 폐광 복구(160억 달러), 대기질 개선 및 공중보건 향상 등을 위해 총 1,000억 달러 투자

주택·학교·병원	3,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만 채 이상의 가정 및 상업용 건물 건설·보존·개량에 2,130억 달러 투자 ·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택구입자를 위해 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 공립학교 시설 보수, 미래의 직업에 대비할 수 있는 실험실과 기술 확보,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시설 및 기술 지원(120억 달러) 등에 총 1,000억 달러 투자 · 퇴역군인을 위한 병원 현대화, 연방 건물 개량사업 등 보건·보육 시설 개선 및 공급에 250억 달러 지원
돌봄 시설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Medicare) · 간병인 임금 인상을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제조업·혁신	5,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및 중소기업 재정비를 위해 3,000억 달러 지원 (국내 제조업체의 자본에 대한 접근성 확대(520), 반도체 제조와 연구(500),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한 연방조달 확대(460), 중소기업 인큐베이터 및 혁신 허브 국가 네트워크 구축(310), 유행병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 방지(300), 지역 혁신거점과 공동체 활성화 기금(200),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지원(140), 지방 일자리 창출(50) 등) · 국립과학재단(NSF) 지원(500),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300), 전국의 연구 인프라 업그레이드(400), 청정에너지 기술(350), 흑인 대학 및 소수민족 봉사기관(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 Minority Serving Institution) R&D 지원에 250억 달러 등 총 1,800억 달러 투자 · 노동자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총 1,00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실직자 직업교육(400), 소외지역 인력개발 기회 확대(120),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원보호 시스템 역량 구축(480)이 포함됨.
총액	22,500	

주: 투자는 8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임.

자료: The White House(2021. 3. 31),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31/fact-sheet-the-american-jobs-plan/>(검색일: 2021. 4. 2).

■ [자원 조달방안] 경기부양책으로는 이례적으로 15년에 걸쳐 2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Made in America Tax Plan)이 포함되었는데,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국세청(IRS)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인하(35%→21%)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고자 함.
 - 법인세 인상으로 6,95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¹²⁾
-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계획임.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¹³⁾
- 글로벌무형자산소득에대한저율과세(GILTI)¹⁴⁾의 최저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한편, 미국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에 대한 첫 10%의 소득 무과세 혜택'도 폐지할 예정임.
 - 해외 자회사가 무형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고정 자산 대비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GILTI를 통해 10.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함으로써 4,950억 달러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¹⁵⁾

12) Financial Times(2021. 4. 1), "Biden unveils \$2tn infrastructure plan and big corporate tax rise," <https://www.ft.com/content/9793903a-e29f-42dc-9b8d-55f960b0ede5>(검색일: 2021. 4. 2).

13) REUTERS(2020. 9. 16), "Fact check: Comparison of proposed taxes under Biden and Trump looks at highest tax bracket only," <https://www.reuters.com/article/uk-factcheck-biden-trump-proposed-taxes-idUSKBN2672GE>(검색일: 2021. 4. 2).

14)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15) Financial Times(2021. 4. 1), "Biden unveils \$2tn infrastructure plan and big corporate tax rise," <https://www.ft.com/content/9793903a-e29f-42dc-9b8d-55f960b0ede5>(검색일: 2021. 4. 2).

- 해외발생무형자산소득(FDII)¹⁶⁾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은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데 사용할 예정임.
-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무형자산(특허, 상표권, 라이선스)의 본국 송환 시 100%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미국 내 무형자산의 해외 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였음.
- FDII 공제제도 도입으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무형자산 소득 중 37.5%를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으며, 공제 후 21%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13.1%의 세금만 납부하였음.
- 장부소득(book income)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재무제표상 소득이 1억 달러 이상일 경우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
- 미국 100대 기업 중 33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¹⁷⁾
- 화석연료 사용 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특별 외국인 세액공제 등 세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환경정화(Environmental Clean Up)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540억 달러¹⁸⁾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IRS)이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세 회피 또는 탈루를 막아 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 10년 전에는 대기업들이 매년 국세청(IRS)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50%를 하회

3. 평가 및 전망

■ [경제적 효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향후 2년 동안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인 성장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¹⁹⁾

- 2021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9.7%(전기대비 연율, 2021년 4월 6일 기준)로,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음.²⁰⁾
- 블룸버그는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는 5.6%로 전망하였으나, 3월에는 6.8%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매월 상향 조정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1,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표함.²¹⁾

16) Foreign-Driven Intangible Income.

17) Forbes(2021. 1. 14), "Which Large U.S. Corporations Would Pay Biden's 15% Minimum Tax?" <https://www.forbes.com/sites/taxnotes/2021/01/14/which-large-us-corporations-would-pay-bidens-15-minimum-tax/?sh=2e0d8527265f>(검색일: 2021. 4. 2).

18) Financial Times(2021. 4. 1), "Biden unveils \$2tn infrastructure plan and big corporate tax rise," <https://www.ft.com/content/9793903a-e29f-42dc-9b8d-55f960b0ede5>(검색일: 2021. 4. 2).

19) Bloomberg(2021. 4. 2), "Hotter U.S. Economy Risks Faster Cooldown as Biden Pushes Pla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31/u-s-heads-for-hotter-shorter-upswing-as-biden-pushes-new-plan>(검색일: 2021. 4. 2).

20) Bloomberg DB(검색일: 2021. 4. 6).

21) Bloomberg(2021. 4. 3), "Biden Says With Infrastructure Bill U.S. May Add 19 Million Job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4-02/biden-says-infrastructure-plan-will-create-19-million-new-jobs>(검색일: 2021. 4. 5).

-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예상치는 무디스(Moody's)의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10년 동안 1,630만 개의 일자리가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자연적 일자리 증가를 통해 생겨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만으로 2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을 시사함.
-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빠른 경기확장은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과도한 레버리지 기반의 투자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²²⁾

■ [재정악화 우려]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1일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예산법안(American Rescue Plan)」에 서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함(3월 31일).
- 또한 '인적' 인프라 중심의 투자 계획(1조~1.75조 달러 규모로 추정)도 4월 중 발표 예정임.
- 연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28조 1,000억 달러(2021년 4월 2일 기준)²³⁾로, GDP(20.9조 달러, 2020년 기준)²⁴⁾의 130%를 상회하고 있음.
- 한편 미 연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총자산이 1년 동안 3조 4,000억 달러(3월 초 기준) 증가함.
- 미 연준의 총자산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4조 달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년 후인 2021년 3월 30일에는 7조 7,000억 달러로 늘어남.²⁵⁾

■ [공화당] 공화당은 '인프라 재건'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증세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²⁶⁾
- 대규모 증세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
-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6,150억 달러로 줄이고 도로, 교량과 같은 물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을 촉구함.²⁷⁾

22) Bloomberg(2021. 4. 2), "Hotter U.S. Economy Risks Faster Cooldown as Biden Pushes Pla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31/u-s-heads-for-hotter-shorter-upswing-as-biden-pushes-new-plan>(검색일: 2021. 4. 2).

23) FiscalData.Treasury.GOV(2021. 4. 5), "Debt to the Penny," <https://fiscaldata.treasury.gov/datasets/debt-to-the-penny/debt-to-the-penny>(검색일: 2021. 4. 6).

24)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B(2021. 4. 5),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Gross Domestic Product," <https://apps.bea.gov/iTable/iTable.cfm?reqid=19&step=2#reqid=19&step=2&isuri=1&1921=survey>(검색일: 2021. 4. 6).

25) The Federal Reserve(2021. 4. 5), "Recent balance sheet trends,"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st_recenttrends.htm(검색일: 2021. 4. 6).

26) CNBC(2021. 4. 1), "McConnell says GOP won't support Biden's infrastructure plan, vows to fight Democratic agenda," <https://www.cnbc.com/2021/04/01/mcconnell-says-gop-will-oppose-biden-infrastructure-plan.html>(검색일: 2021. 4. 5).

27) Bloomberg(2021. 4. 4), "Republican Sen. Roy Blunt calls on Biden to slash massive infrastructure plan to \$615 billion," <https://www.cnbc.com/2021/04/04/infrastructure-gop-sen-roy-blunt-calls-on-biden-to-slash-plan-to-615-billion.html>(검색일: 2021. 4. 5).

- 공화당 상원 서열 4위인 로이 블런트(Roy Blunt) 의원은 2조 2,500억 달러 가운데 인프라의 정의를 확대하더라도 약 30%만이 전통적인 인프라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함.
- 테이트 리브스(Tate Reeves) 미시시피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2조 달러 ‘증세 계획(tax hike plan)’으로 보이며, 경제성장을 더디게 만들고 상당수의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함.²⁸⁾
- 야당인 공화당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증세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투자 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전통적으로 선호해왔음.

■ [기업] 민간기업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률(21%→28%) 등 증세정책이 과도하다고 보고 인프라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 상공회의소 및 미국의 주요 기업 CEO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에서 공식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계획안에 반대하고 있음.²⁹⁾
- 국내 법인세 등 세율이 인상되면 미국기업의 해외 이전과 일자리 유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³⁰⁾
- 일부 기업인들은 25%의 법인세율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글로벌 최저 세율 정책을 동반하지 않고 기업 납세 부담만으로 국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³¹⁾
- 기업인들은 미국의 유류세(fuel tax)를 올리고 전기차 사용자에게 주행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인 VMT³²⁾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유류세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함.³³⁾
- 미국은 가솔린 1갤런당 18.4센트, 디젤 1갤런당 24.4센트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1993년 이후 연료 효율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임.³⁴⁾
- 또한 전기차 사용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는 제공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건설을 위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³⁵⁾

■ [의회 통과 가능성] 민주당은 8월 휴회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나, 공화당이 법인세 인상 반대, 투자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28) The Guardian(2021. 4. 4), “Republicans claim Biden \$2tn infrastructure plan a partisan tax hike,”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1/apr/04/biden-2tn-infrastructure-plan-republicans-senate-tax-green-new-deal>(검색일: 2021. 4. 7).

29) Politico(2021. 4. 6). “Corporate America tears down Biden’s infrastructure plan.”

30) *Ibid.*

31) *Ibid.*

32) Vehicle’s Mileage Traveled.

33) Reuters(2021. 3. 31). “Analysis: Corporations, wealthy pay in Biden infrastructure plan, not drivers and rid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biden-tax-analysis/analysis-corporations-wealthy-pay-in-biden-infrastructure-plan-not-drivers-and-riders-idUSKBN2BM14D>(검색일: 2021. 4. 5).

34) *Ibid.*

35) *Ibid.*

- 5개(교통부, 에너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 상무부)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에서 의회와 협의하여 인프라 투자 제안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향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³⁶⁾
- 2022년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힘.³⁷⁾
-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세금 인상 반대, 투자 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제안된 인프라 투자 계획의 수정 없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³⁸⁾
 -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법안」이 2021년 3월 7일 상원을 통과하였는데,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음.
-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회계연도 2021년 예산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단순 과반만으로 표결하기 위하여 예산조정(reconciliation)³⁹⁾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 상원 100석 중 50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필리버스터를 우회하여 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민주당은 지난 3월 초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예산법안」도 예산조정 제도를 이용해 통과시킨 바 있음.

■ [한국에 대한 영향] 대규모 인프라 투자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은 한국의 수출, 투자 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현실화, 고위험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건축자재, 중장비, 기계 및 부품, 철강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한 연방조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일 첫 내각회의에서 ‘연방조달 물품에 대한 미국산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Buy American’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어 관련 논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⁴⁰⁾
-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으로 미국 내 첨단기술 기업과 제약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⁴¹⁾됨에 따라 미국정부는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하여 각국 정부에 “함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자”며 법인세를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⁴²⁾

36) CNBC(2021. 4. 1), “McConnell says GOP won’t support Biden’s infrastructure plan, vows to fight Democratic agenda,” <https://www.nbc.com/2021/04/01/mcconnell-says-gop-will-oppose-biden-infrastructure-plan.html>(검색일: 2021. 4. 5).

37) USA Today(2021. 4. 4), “How does Biden plan to get infrastructure plan through Congress?”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1/04/01/president-joe-biden-infrastructure-plan-how-pass-congress/4823282001/>(검색일: 2021. 4. 6).

38) Bloomberg(2021. 4. 4), “Republican Sen. Roy Blunt calls on Biden to slash massive infrastructure plan to \$615 billion,” <https://www.cnbc.com/2021/04/04/infrastructure-gop-sen-roy-blunt-calls-on-biden-to-slash-plan-to-615-billion.html>(검색일: 2021. 4. 5).

39) 지출, 세수, 연방 부채 한도 관련 법안 중 매년 1건에 대해서는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0) Washington Trade Daily(2021. 4. 2), “Biden Wants Buy American Review,” Vol 30, No 65, p. 1.

41) Bloomberg(2021. 4. 6), “Biden Tax Plan Seen Hitting Tech, Pharmaceutical Compani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4-06/biden-tax-plan-seen-hitting-technology-pharmaceutical-companies?sref=QbgqEltZ>(검색일: 2021. 4. 7).

42) Financial Times(2021. 4. 6), “Janet Yellen calls for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https://www.ft.com/content/79023ff2-c629-429>

-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위험관리에 앞서 고수익 추구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경우 금융 불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보유자산에 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온 아케고스 캐피탈(Archegos Capital)이 3월 말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실패함에 따라, 아케고스 캐피탈에 돈을 빌려준 Credit Suisse, Nomura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관련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처분하는 일이 발생함.⁴³⁾
- 경기하락 상황에서는 아케고스 캐피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연될 경우 금융시스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EP

c-8a34-16bf68b4ea15(검색일: 2021. 4. 7).

43) The Wall Street Journal(2021. 3. 29), "Archegos Liquidation Hit Nomura, Credit Suisse," <https://www.wsj.com/articles/japans-nomura-says-u-s-client-owes-it-2-billion-shares-fall-15-11616992085>(검색일: 2021. 4. 7).